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2029년부터 통합교육"

육군사관학교, 충청권으로 이전
군별 특성 유지하는 절충안 마련
육·해·공 연계 교육체계로 개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18일 대전광역시 자운대 일대에 미래 정예 장교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오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생도를 선발하는 등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김병주 국방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인구 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첨단화와 과학화를 선도할 국방 인재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란 점을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미래전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표로 제시하고 대전 자운대에 통합교육을 위한 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 전략형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설립할 것"이라며 "각군 교육을 위해 육해공군 캠퍼스를 구성해 각군 특성과 합동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육해공군 학부 개념으로 할 예정"이라며 "교육 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을 함께 교육하는 체계로 개편해 통합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2~3학년 교육과 군사훈련은 각군 주도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간사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국군사관학교 선발은 각 군별로 실시하고 새 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가 창설되는 자운대에 상주하는 기존 군부대의 이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양상을 띨 것"이라며 "무인 자율 무기와 AI(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가 전면 도입되는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방식만으로는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지금 우리 군은 도약과 도태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낭떠러지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를 것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과감하게 뛰어오르지 않으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미래 정예 장교의 인재상으로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군 사관학교의 창설은 우리 군의 미래를 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완전히 통합해 4년 동안 전면 통합 교육을 받는 단일 4년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군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며 1학년 때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 때 각 군 사관학교로 흩어져 교육을 받다가 4학년 때 다시 통합교육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반도체 공사대금 '지급기한 단축' 협약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내 현금 지급
"조기 지급 관행, 현장 정착하도록 관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대금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공사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18일 '반도체 대기업 원도급, 하도급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이용선 품격민생위 부위원장 이건태·이강일·김남근·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정부 관계자,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예병용 삼성물산 부사장, 함동균 SK하이닉스 부사장, 장문혁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등 기업관계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해 손을 맞잡았다.

반도체 건설 현장에선 대기업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9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고, 원도급사는 다시 하도급사에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해왔다.

현행 하도급법상 도급사는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 공사 등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임금과 자재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도급사에 기성대금을 청구한 뒤 실제 대금 지급까지 8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해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상생협약은 반도체 국내 양대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도급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열리게 됐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특히 SK하이닉스는 공사 대금에 대해서 올 10월 계약금부터 공사 선급금 10%를 지급하고 있다"며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치켜세웠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K자 양극화는 같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한 현장에서 어음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었다. 그래도 258개 협력업체는 임금과 자재값을 먼저 현금으로 치르고 대금을 받기까지 80일을 버텨야 했다"면서 "발주처는 호황인데 협력업체엔 외상과 이자만 늘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하도급법엔 (지급 상한이) 60일이다. 이 말은 가능한 60일 내에 빨리 대금을 지급하란 것"이라며 "(그런데) 60일이 현장에선 기준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상생 협약에서 발주처와 원도급사 모두 대금을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안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정말 중요한 결단이다. 호황의 온기가 맨 아래 현장까지 닿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관행을 바꾸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새로운 관행이 되길 바란다"며 "그 관행이 잘 지켜지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與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국힘 필버 예고

주택3법·방송3법도 상정 시기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와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알리며 "19일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유공자법은 상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 부의 법안이 몇개가 될 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과 방송 관련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냐는 질문에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주택3법과 방송3법을 이번주에 올릴 지 다음에 올릴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추경호 무죄에 다시 불붙은 내란 공방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무죄 판결
與 김민석 "법원의 퇴행적 판결"
野 장동혁 "정의와 상식의 승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게 잇달아 무죄와 감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다.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소통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인가"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도 추 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여러 창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검을 향해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이 정치적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특검이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며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 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잃었다.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시장은 무죄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구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